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란  
실정

# CONTENTS

## I. 정치 파란

### 이재명 정부 인사참사

01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무력화	09
02	잇단 무자격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11
03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12
04	이춘석 국기문란 게이트	14
05	부적격 인사혁신처장(최동석) 임명	16
06	성남라인·김현지 총무비서관 '그림자 권력' 논란	18

### 사법부·검찰·방송 장악을 통한 독재 서막

07	반헌법·불법 3대특검	21
08	사법부 장악	22
09	검찰폐지 4법	23
10	땡명뉴스의 시작, 방송 3법 개악부터 방통위 해체까지	24
11	표현의 자유 말살시키는 언론중재법 개정 재추진	25

### 야당 탄압·무시

12	여야 협치 기대 걷어찬 '야당 해산' 겁박 여당	27
13	협치 외면한 '셀프 대관' 국민 임명식 강행	28

### 내 편만 먼저다

14	내편 챙기는 정치 사면	31
15	여권의 내로남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추진	32
16	민주유공자예우법 국정과제 추진	33

### 국익보다 정치 논리 우선

17	4대강 보 해체 및 기후대응담 추진 폐기	35
18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	36

## II. 경제 실정

### 반기업법으로 경제죽이기

19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41
20	상법개악	42

21	기업과 자본시장의 성장을 막는 반시장적 과세	43
22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44

### 부동산 부도정책

23	9.7 부동산 공급대책 진정성 없는 박스같이와 무책임한 LH 떠넘기기	47
24	대출 규제 6.27 부동산 대책	48

### 민생경제 파탄

25	'쉬웠음 청년' 지속 증가에도 민생 파탄 정책 가속화	51
26	밥상물가 고공행진	52
27	이재명 정부의 신관치금융	53

## III. 외교안보 참사

### 외교참사

28	서해 불법 구조물 방치	57
29	외교적 선언만 있고 실익은 없는 대미외교	58
30	전략 부재로 인한 대중·대러 외교 실패	60

### 굴욕적 통상협상

31	국가경제 파탄 관세협상	63
----	--------------	----

### 굴종적 남북관계, 안보위협

32	이재명 정부의 9.19 군사협정 복원	65
33	원칙없는 남북대화 집착	66
34	대북전단 금지	67
35	전작권 폐지 국정과제 추진	68

## IV. 미래세대 부담

### 반건전 재정

36	미래 세대 부담만 늘리는 '부채주도 성장'	73
37	선심성 소비쿠폰 지급	74
38	국가 재정 건전성 위협하는 선심성 포퓰리즘 복지 정책	75
39	문지마 채무탕감(배드뱅크)	76

### 교육차별

40	AI 교과서 혼란	79
----	-----------	----

PART

I

정치 파탄

”

이재명 정부 인사참사  
사법부·검찰·방송 장악을 통한 독재 서막  
야당 탄압·무시  
내 편만 먼저다  
국익보다 정치 논리 우선

“

“

## 이재명 정부 인사참사

”

이재명 정부 100일

01

국정 파탄 실정

##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무력화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이재명 정부 출범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제도 유명무실화 초래
  -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따른 국민의 정치 불신만 야기
- 이재명 정부의 모든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부실 검증
  -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 청문회 이후 증인·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인사청문회 반복
  - 25.9월 현재 공직후보자 25명 대상 인사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인·참고인은 고작 15명(증인 12명·참고인 3명)
  - 정성호 법무부장관·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정동영 통일부장관·배경훈 과기정통부장관·최교진 교육부장관·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원민경 여가부장관 후보자 등 증인 참고인 단 한 명도 없이 진행
  - 우리당은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 등과 관련한 증인·참고인 채택을 요구하였으나 민주당은 후보자 검증과 무관한 정치공세적 증인·참고인 채택만을 즐기치게 요구
  - 상임위내 다수의석을 앞세워 모든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유명무실화하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절차를 무력화하는 상황
-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법안까지 제출
  - 청렴성·도덕성 검증을 위한 공직윤리청문회(비공개)와 전문성·정책역량 검증을 위한 공직역량 청문회로 분리 실시 주장
    - ※ 25.9.2.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민감한 사생활을 별도로 비공개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 소위원회 설치’를 주내용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함”
  - 청문자료의 비공개 열람 범위 확대 주장
  - 인사청문기한 확대(현행 20일에서 30일) 및 청문회 실시기간 확대(현행 3일에서 5일) 등 주장

## 02

국정 파탄 실정

잇단 무자격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

”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민주당 주장 인사청문회 제도 변경은 공직후보자 검증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 공직후보자 제출 자료의 비공개 범위 확대시 '국민의 알권리'를 정면으로 침해
  - 인사청문 기간 연장에 따른 검증 실효성 추락, 임명 지연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국가 중요 정책결정 지연 등 우려
  -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벌 강화, 제출자료 범위 확대 및 미제출 시 형사처벌, 출석요구서의 전자문서 발송·수신 허용, 인사청문대상 확대 등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후 태도를 바꾸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대통령실은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헌신한 자타공인 교육 전문가”라고 발표했지만, 이진숙 후보자 낙마 이후 지명된 최교진 후보자도 논문 표절 의혹부터 정치 편향성까지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기본 자질은 더욱 부족
- 주요 쟁점
  - 음주운전, 학생 체벌, 막말, 천안함 음모론 제기, 부산·대구 폄하 발언, 입시 비리(아빠 찬스) 조국 옹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사법살인'으로 규정한 글 공유 등
- 경과
  -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7.20.)
    - ※ 주요 논란 : 교육 이해도 부족, 논문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논문 찌꺼기(중복게재)로 연구비 부당 수령, 자녀 연 1억원 불법 조기 유학(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 위반)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8.13.)
  -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9.2.)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편향된 사상의 교육관과 왜곡된 주관은 미래 세대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주입할 우려 큼
  - SNS에 천안함 음모론 관련 게시물 게재하여 국가 안보를 희화화
  - 17번 북한 관광 방문
    - ※ 한국토지공사 감사 재직 중 8번 방문, 북한 1차 핵실험이 있던 직후 2006년 10월 16일 금강산 관광 방문,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2008년 10월 14일 개성 관광 방문
  - 과거 '미국이 없었다면 한국은 사회주의 모범국가가 됐을 것'이라는 글에 '공감한다'고 했음에도, 청문회에서 '그런 적 없다'며 거짓으로 답함
- 도덕성과 윤리의식 결여
  - 혈중알코올농도 0.187%(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및 10여 차례 교통법규 위반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적 결함 및 정책적 역량 부족과 이를 걸러내지 못한 부실한 인사검증 및 측근인사 행태
  - 갑질 논란
    - 보좌진 갑질 논란 : 자택 쓰레기 처리, 변기 수리 등 보좌진 사적 업무 지시 의혹
    - 前 여가부 장관 예산 갑질 논란 : 본인 지역구 사업을 위해 여성가족부 예산 압박 의혹
  - 재산·세금 논란 및 이해충돌 논란
    - 배우자 스톡옵션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 재산 논란
    - 복지위 활동시 배우자 신약 개발 회사 감사 재직 등 이해충돌 논란
    - 후보 지명 후 종합소득세 등 세금 몰아 납부
    - 부동산 투기 의혹 : 고양 삼송동 복합건물 개발 관련
    - 명품 시계, 고가 의류 등 재산신고 누락 의혹
  - 학문적 부도덕
    - 미국 사우스다코타주립대학교 조교수 시절 선거운동을 위해 무단 온라인 강의 전환 의혹
    -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시절 무단 결강 의혹
  - 그 외에도 쌍방울그룹 임원들로부터 '쫄개기후원' 의혹, 막말 등 인성 관련 제보 다수
    - ※ 여러 의혹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해 개인정보 부동의 등으로 자료 45%이상 미제출
- 우리당, '강선우 방지법' 발의하며 대응
  - (자료제출 불응 및 허위 진술 방지) 인사청문회법 : 조은희, 25.7.24, 2211699
    - 공직후보자에 대한 허위 진술의 죄 규정, 후보자 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죄 내용 추가
    - 자료제출 대상을 공직후보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확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하는 기간은 위원회 활동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의 장에 대한 거짓 자료제출 등의 죄 규정
    -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대통령, 대법원장이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는 경우 국회에 그 사실과 이유를 알리도록 함
  - (갑질 방지) 국회법 : 한지아, 25.8.25, 2212337
    - 국회의원이 보좌직원에게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폭언·모욕·부당한 지시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정책 의사결정에서의 도덕성 문제 확산
  - 특히 여성가족부라는 양성평등과 권익 증진을 담당하는 부처 수장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인사 지명
- 공직후보자의 불성실·불투명한 인사청문회 태도 관련 국민 불신 확대
  - 자료 제출 불응
  -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

## 04

## 이춘석 국기문란 게이트

국정 파탄 실정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무소속), 8.4.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 이용해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하는 모습 포착되며 ‘이춘석 게이트’ 촉발
  - 이춘석 의원, 법사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 맡고 있던 상황에서 네이버, LG CNS 등 AI 관련주 거래로 미공개 정보 이용과 이해충돌 의혹 접화
    - ※ 작년 10.7.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좌관 명의 주식 계좌 창 보는 장면 既 보도
  - ▲미공개 정책 정보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차명 거래 금융실명법 위반 ▲주식 보유 내역 미신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주식 자금 출처 중 정치자금 포함 여부에 따라 정치자금법 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가능성
- 정부·여당 대응
  - 정청래 민주당 대표, 8.5. 긴급 진상 조사 지시 후 8.6.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 ‘제명’ 조치 및 후임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 지명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8.6.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진상 파악 및 공평무사한 엄정 수사’와 ‘국정기획위 즉시 해촉’ 지시 발표
- 우리당 대응
  - 8.5. 송언석 원내대표, 긴급 현안 브리핑에서 윤리위 제소 및 형사고발 예고
  - 8.7. 송언석 원내대표,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형 내부 정보 악용 국기 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에 참여한 모든 사람 대상 차명재산 전수조사 요구” 발언
  - 8.7. 의원총회 후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당론 발의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국가 지도자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타격 가능성
  - 이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당시 후보 비서실장, 대선 후 국정기획위 요직 맡은 상황에서 대통령 측근의 주식 차명 거래에 대한 비판 여론 심화
  - 공직자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및 정치 혐오 가중
- 개미 투자자 민심 악화 및 주식 시장 불안 심화 우려
  - 대통령이 ‘코스피 5000’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불공정 거래 엄단’ 방침 수차례 밝힌 상황에서 정책 핵심 정보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미공개 정보 이용하여 정책 수혜주 매매한 것으로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신뢰 하락

## 부적격 인사혁신처장(최동석) 임명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본인이 직접 개발했다는 성취예측모형이 있는데 정직성, 자기 인식 능력, 과거 행적과 성과, 의사 결정 패턴, 비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매기는 방식
  - 그러나 객관적 비교나 외부 검증은 찾아볼 수도 없음
  - 대표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96점, 추미애 의원 78점 등 극히 주관적 점수를 적용
  - \* 60점 이상 : 헌법기관장, 50~60점 : 국회의원/장관, 40~50점 : 고위공무원

- 유튜버 시절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아부성 발언

-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야 하고 우리 국가도 우리 민족 전체가 이재명의 국가가 돼야 한다.”
- “영재성을 가진 천재다.”
-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생각도 한다.”
- “5년은 너무 짧다. 10년, 20년을 해도 된다. (눈물을 흘리며)5년은 너무 짧다. 헌법을 좀 바꿔서라도 더 길게 했으면 좋겠다.”

- 심지어 이 대통령의 욕설을 하이데거의 존재 경험이라고 감싸는 부분이나 김어준 씨와 묶어 '새로운 장르를 창조한 두 천재'라고 표현

-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원칙에 대해서도 “아주 멍청한 기준으로 결국 나라를 들어먹었다”면서 맹비난 했음. 그 기준에 따르면 본인은 고위공직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의문
  - 조국사태 때는 본인 폐복에 도덕성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음
- 최근 국무회의를 공개해서 인사혁신처장의 언행을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볼 수 있음. 국무회의에서 본인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랍시고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라고 함
  - 국무회의 산업재해 토론에서 갑자기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는 교육이 필요하다’ 등 종잡을 수 없는 발언을 하자 대통령이 결론만 말하라며 제지를 하기도 했음
- 압권은 윤미향 씨를 두둔하며 이용수 할머니를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모욕한 것. 이런 인식에 맞춰 광복절 특사로 윤미향 씨를 사면함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공직사회 기강 해이 및 신뢰도 추락
  - 인사혁신을 담당하는 수장의 부적절한 언행
  - 막말 유튜버가 공직 인사를 총괄한다는 인식으로 공직사회 권위 실추
- 정부 인사시스템 무력화
  - 인사 검증의 허술로 고위직 인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대
  - 여당 내에서도 “민망하다”, “직무수행 어렵다”는 비판
- 사회통합 저해
  - 특정 정치인 지지자들을 ‘우매하다’고 비하하며 정치적 갈등 조장
  - 이재명 대통령만 일방적 찬양하는 편향적 인사로 국정 운영 신뢰성 우려

## 성남라인·김현지 총무비서관 ‘그림자 권력’ 논란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이재명 정부 핵심 ‘문고리’ 라인에 성남·경기라인 인사 배치
  - 대통령 면담 일정 조율 및 보고서 전달하는 부속실장에 성남시장 재임 때부터 대변인으로 활동한 김남준 전 당대표실 정무부실장 임명
  - 김혜경 여사 관련 업무 담당할 제2부속실장에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윤기천 전 성남 FC 대표이사 임명
  - 고위공직자 인사 담당하는 인사비서관에 경기도 비서관이었던 김용채 전 보좌관 임명
  - 그밖에 ▲국정기획비서관(권순정) ▲정무비서관(김병욱) ▲국정과제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김락중) 등 ‘경기·성남 라인’으로 지목
- 특히, 대통령실 예산·조직 등 살림 전반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에 김현지 전 보좌관 임명돼 논란 확산
  -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인사 통보했다는 사실 보도되며 ‘정권 실세 중 실세’로 평가되는 가운데, 학력 등 공개되지 않아 ‘그림자 권력’ 지적
  - 우리당,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에 김 비서관 출석 요구했으나 이례적 불참 통보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국정 운영 및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와 이에 따른 불투명성·부패 심화 우려
  - 사적 관계에 따라 권력 행사할 경우 국민 전체의 이익이 아닌 특정 집단·개인의 이익 우선될 수 있어 국민 피해 확대
  - 공식 직함에 비해 큰 권력 행사하게 될 경우, 책임 소재 불분명해지고 국정 운영 불투명성 악화
  - 정치적 결정에 대한 국민 불신 커지면서 정치 혐오·냉소 심화 가능성

“

## 사법부·검찰·방송 장악을 통한 독재 서막

”

이재명 정부 100일

07

### 반헌법·불법 3대특검

국정 파탄 실정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경과
  - 25.6.6. 본회의에서 3특검 일괄 통과
  - 25.9.4. 법사위에서 더 센 3대 특검 일괄 통과
- 쟁점
  - 이재명대통령과 민주당의 하명을 받은 특검
  - 수사·기소 분리하자면서 특검에는 둘 다 주는 행태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성과는 없고 망신주기에만 집중하는 정치특검
  - 증거없이 억지로 망신주기식 기소만 하고 있는 특검
  - 특검과 한통속이 되어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을 하는 더불어민주당
-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
  - 수사·기소권 분리 주장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본인들 하명수사 하는 특검에는 수사·기소권 둘 다 주는 행위 하고 있음
- 사법부와 법무부도 우려
  - 재판중계관련해 사법부(대법원 법원행정처)조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훼손
  - 수사인력 총원시 일선 검찰청의 업무공백 및 민사사건 수사 지연 심화

## 08

국정 파탄 실정

## 사법부 장악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경과
  - 25.6.4.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
  - 25.9.12. 전국 법관회의 개최(예정)
- 쟁점
  - 대법관 증원
  - 대법관 추천 방식 변경
  - 법관 평가제도 변경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대법관 증원을 통한 독재의 서막
  - 증원되는 만큼의 대법관을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 임명을 통해 사법부 완전 장악
  - 베네수엘라도 2004년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서 당시 좌파정부에서 본인들의 성향에 맞는 재판관만 임명해 언론 및 야당 탄압의 도구로 사용
  - 대법관 추천 방식 변경으로 시민단체,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의 입김이 강화되어 그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만 임명될 우려 높음
  - 시민단체 및 민변 등을 통한 법관 평가로 더불어민주당에 좋지 않은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한 인사보복 현실화로 법관 길들이기
- 대법관 증원을 통한 하급심 부실화
  - 준비 없는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실심(1,2심) 부실로 재판지연 등의 피해를 국민이 입게 됨

## 09

국정 파탄 실정

## 검찰폐지 4법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경과
  - 25.7. 검찰폐지법안 제출
  - 25.9.4. 법사위에서 검찰폐지 법안 공청회 실시
- 쟁점
  - 반헌법적 입법으로 입법부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안
  - 수사·기소 강제 분리는 형사사법의 근간 형해화 우려
  - 국민 피해 우려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위헌
  - 헌법 제89조는 검찰총장의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2조는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
  - 이러한 헌법적 지위를 가진 '검사'와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소속될 조직을 법률로 폐지하고, 이름만 남긴 채 영똥한 조직에 이관한다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 아님
- 수사·기소의 강제 분리는 형사사법의 근간 형해화 우려
  - 지능화·조직화·대형화하는 중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것이 국제기구,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사법 선진국의 최근 추세
  - 입증곤란으로 무죄율이 증가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음
- 일반의 심각한 국민 피해 우려
  - 검찰의 수사권은 정치적 접근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
  -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공수처는 물론이고 경찰과도 그 차이가 현격하다는 것이 법조계 통설임

이재명 정부 100일

10

## 땡명뉴스의 시작, 방송 3법 개악부터 방통위 해체까지

국정 파탄 실정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방송독재 3법 통과에 이어 방통위 해체 후 본격 간섭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을 위한 제2의 국보위 법도 9월 국회 단독 통과 강행
  - KBS 관련 방송법(8.5.), MBC에 대한 방문진법(8.21.), EBS법(8.22.)을 민주당 단독 처리
  - 이어, 방송 장악의 대미를 위해, 민주당은 방통위 폐지를 위한 김현 간사 단독안 졸속 입법에 절차 추진 중이며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개최(9.5.)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통위원장 면직 등 대체 위원회 신설 위한 요식 행위 진행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방송의 정치편향 심화 우려
  - 땡명뉴스 시대 도래, 공영방송 자체 사전·사후 검열 가속화. 민노총의 언론 장악
  - 심의에 대한 위원장도 정무직 공무원화, 정부 간섭의 합법적 보장
- 공영방송(KBS·MBC·EBS)은 물론 SBS, YTN 등 민영방송에 대한 노조 영향력 강화
  - 경영행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간섭. 민영방송도 노조의 영향력 본격화
- 지배구조 복잡해져 책임소재 불분명
  - 책임 있는 경영 및 방송편성 불가능 및 방송의 독립성, 전문성 약화
- 위헌 소지 다분하며, 국민의 알 권리 말살
  - 법으로 정무직 공무원을 면직시키는 초유의 사태, 위헌 입법
  - 사실과 다양한 정보의 장을 통제하는 방송 거버넌스 개악으로 국민의 알 권리 말살

이재명 정부 100일

11

## 표현의 자유 말살시키는 언론중재법 개정 재추진

국정 파탄 실정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고의적 왜곡·허위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재추진
  - (25.9.5.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언론중재법 초안 공개)
  - 허위사실 또는 조작된 정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중에 알리는 행위와 보도물을 ‘허위조작 보도’로 규정하고 언론에 최대 10배 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에 인용·매개보도, 유튜브와 SNS까지 포함
  - 언론의 허위조작보도로 손해 발생 시, 손해액의 배액(倍額)으로 배상 금액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 도입
- 더불어민주당(8.14.), 언론개혁특위 구성한 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 6대 언론개혁 의제 추석 前까지 마무리 공언
  - 이재명 대통령(8.18.),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나 고의적 왜곡 및 허위정보 신속 수정 해야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발언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언론사의 과도한 자기검열 강화로 언론 자유 훼손 우려
  - 손해액의 하한은 두는 기본손해액 조항, 고의·중과실 추정에 따른 입증 책임 전환 요건 등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 가능성
  - 정부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자의적인 이행으로 이어질 가능성
- 언론인단체,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속도전 우려하면서 사회적 속의를 통한 시민피해구제 확대 및 언론의 권력감시기능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촉구
  - 내부자 고발 보도 사실상 불가능, 취재원 보호 등 조치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

이재명 정부 100일

12

국정 파탄 실정

## 여야 협치 기대 걷어찬 ‘야당 해산’ 겁박 여당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9.9.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표현 26번, ‘청산’ 표현 19번 사용하며 우리당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것” 겁박
  - 특히, 전날(9.8.)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회 구성에 합의하여 정치 복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 뜻 저버렸다는 평가
- 정 대표, 정당 해산 법안 발의 및 공개 발언 등 통해 야당 겁박 일상화
  - 7.15. 국회에 정당해산심판 청구요구권 부여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 공개회의체 발언에서 “얼번 백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 해산 압박 발언 반복하며 ‘야당 말살’ 시도 지속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야당 파괴, 보수 궤멸 일당 독재 구축 시도 가속화 가능성
  - ‘비판과 견제 없는 권력’에 대한 국민적 불안 증대
  - 고질적 진영 갈등 부추기며 국민 분열 심화 가능성
- 브레이크 없는 여당 입법 폭주로 민생 파탄 가능성
  - 야당 무시하며 마음대로 국정 운영하는 여당 입법 폭주로 대내외적 경제·민생 위기 극복 요원해질 우려

야당  
탄압·무시

## 협치 외면한 ‘셀프 대관’ 국민 임명식 강행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이재명 대통령, 8.15.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 참석
  - 이 대통령, 임기 시작 6.4.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식 참석한 지 72일 만에 행안부 주최로 대규모 취임 행사 개최
- 정부, 우리당 지도부와 함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故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배우자 등 초청했으나 모두 불참
  - 우리당, “광복절은 독립 유공자의 날인데 대통령이 국민 임명장을 받겠다고 하면 그들은 병풍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지적
  - 특히, 조국·윤미향 등 포함한 특별사면 이뤄지는 가운데 광복절에 진행되는 국민 임명식 참석할 수 없다는 판단 작용
- 주요 언론, 경청과 통합 내세우며 ‘모두의 대통령’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이 협치 외면한 ‘반쪽 짜리 행사’가 됐다는 점 비판
  - ※ [사실] 좌우 양쪽서 ‘대통령 임명식’ 불참, 광복절날 둘로 쪼개지는 나라 (조선일보, 8.14.)
  - [사실] 광복 80년 의미 되새겨야 할 오늘, 반쪽 된 국민임명식 (세계일보, 8.15.)
  - [사실] 與, ‘반쪽 임명식’ 돌아보고 국민 통합과 협치 적극 나서야 (국민일보, 8.15.)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정부·여당의 협치 외면과 ‘제1야당 패싱’ 지속되면서 여야 대치 정국 심화
  - 민생경제 회복,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민생 직결 정책·법안 처리 지연 가능성
  - 정치에 대한 국민 피로도 증대 및 정치 효능감 저하 우려

“

내 편만 먼저다

”

이재명 정부 100일

14

## 내편 챙기는 정치 사면

국정 파탄 실정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경과
  - 25.8.15. 광복절 특사로 입시비리범 조국일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범 윤미향 사면
- 쟁점
  - 대통령 사면권 발동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문제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대통령 최측근인 이화영·김용 사면 가능성
  - 불법대북송금 사건 공범(이화영)
  - 불법정치자금·뇌물 수수(김용)
- 대통령 사면방지법 발의
  -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는 헌법상의 권한
  - 사면권에 대한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필요  
(사면법(개) 내용 대통령, 대통령의 배우자 및 친족,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사람 제외)

## 15

여권의 내로남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추진

국정 파탄 실정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공공기관 임원(기관장·이사·감사 등)을 정권의 '전리품화' 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다수 의원이 법안 발의
-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만료 6개월 전 59명의 기관장을 임명.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체 공공기관 임원 중 86%가 문 정부 추천 인사로 채워지는 등 끝까지 알박기 인사 남발
- 민주당은 문 정권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장관이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반성은 커녕 이제는 법 개정을 통해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정치 보복도 합법화시키려고 시도 중
- 주요 쟁점
  -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연계해 단축 (3년→2년)
  - 정권의 정책기조와 상충되는 임원은 평가를 통해 해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임기단축 소급 적용은 위헌 소지 등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정치탄압) 윤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해임 우려, '국정철학과의 불일치' 등 자의적인 해임 기준 논란 소지. 이재명 정권 '대선 보은인사'를 위해 현 기관장에 대한 거취 압박 강화 예상
- (위헌성) 기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축소하고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급입법에 해당되며, 중대한 공익적 사유도 보이지 않아 위헌적
- (OECD 주요국 사례)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음. OECD는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기관장 임명은 선거주기와 무관하게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경쟁적 절차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기관장의 임기가 불명확하고, 정권에 따라 자주 변경될 경우, 경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명시.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정면으로 역행. 기관장의 임기는 법과 제도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며, 기관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춰 일괄 교체할 경우 공공기관은 '정권의 놀이터', '하청업체'로 전락할 우려

## 16

민주유공자예우법  
국정과제 추진

국정 파탄 실정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민주유공자(민주화운동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인정받은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및 유족 등)에 대한 예우
  - 예우 : 의료, 양로, 요양, 기념·추모사업의 추진 등
  - \* 교육 등의 지원사항은 제정안에 없으나(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입 특별전형 대상에 해당
- 21대 국회 말, 민주당이 단독처리했으나 재의요구권 행사
- (25.7.31.) 권오을 보훈부장관, 민주유공자예우법 추진 의지 피력
  - "장관이 되어서 민주화를 하다 유명을 달리한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등 여러 열사들이 유공자로 돼 있지 않아 놀랐다"며 "이분들이 전혀 유공자 예우를 못 받고 있어서 민주유공자법을 추진해 명예를 찾아줘야 한다"고 발언
- (25.7.31.)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와 관련된 주요 민생 법안은 논의를 충분히 하겠지만 안 되는 것들을 미루지는 않겠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 표명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 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유공자'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임
  - 「민주화보상법」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 \* 전교조·언론·노동운동, 독재정권 반대운동, 반미운동, 노점상 피해사건 및 부산 동의대 사건·서울대 프락치 사건·남민전 등 사회적 논란 야기 사건 등 포함
- 국가보안법 위반을 포함, 법 위반 등의 사유로 민주유공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소위 '뉘우침심사' 등 보훈심사위원회 결정을 통해 민주유공자 지정 가능

이재명 정부 100일

17

국정 파탄 실정

4대강 보 해체 및  
기후대응댐 추진 폐기

“

국익보다  
정치 논리 우선

”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주요 내용
  - 이재명 정부의 환경 분야 공약인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재자연화'는 → 보 해체를 고려한 사전 포석이란 관측
  - 이재명 대선 공약인 '조건부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에 따라 환경부에서 既 추진했던 기후 대응댐 추진 정책 폐기 우려
  - 이미 기후대응댐 관련 최종후보지 9곳 + 예비후보지 1곳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 절차가 진행 중으로, 해당 지역의 기후대응 필요성과 여론 수렴을 토대로 추진됐던 국책사업의 졸속 번복이 우려되는 상황
- 경과
  -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로 4대강 보 개방 확대, 4대강 재자연화를 공언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에서는 폐기조건으로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주민이 원치 않는다'는 조건을 건 백지화 입장이나, 이는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홍수 피해가 일상화된 현실에 비춰 적절한 대책이 아닐뿐더러 과하다 싶을만큼 대비해도 부족할 국민안전과 민생을 담보로 한 도박

##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 관련 조직과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하는 조직개편안 확정(9.7.)
  - 더불어민주당, 대선 과정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 제시
  - 국정기획위원회는 산업부 에너지실과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을 통합한 신설안 검토에 이어 에너지실을 환경부 산하에 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제안, 환경부의 관련 내용 대통령실에 보고(언론보도)
  - 정부조직법(개) 위성곤의원(민) 대표발의(8.29.)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에너지 정책 조직과 사무를 진흥과 개발, 수출 등을 목표로 하는 산업부에서 규제와 관리, 보전 등 중심의 환경부로 이관은 정책적 모순, 갈등과 충돌 우려
  - 산업현장과 에너지 정책은 불가분의 관계로 여야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국가적 과제
  -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해오던 산업부와 경제현장에 대한란 초래. 관련 산하기관 인사도 환경 분야 인사로 진행될 경우 정책 혼선과 후퇴 불가피
  - \* 환경부장관의 편향된 정책 추진 우려로 산업부와 환경부의 갈등과 반발 예상
-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표방하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의 날씨, 기후, 지형 등 자연조건에 불리함에도, 막대한 규모의 세금투입의 명분 제공
  - 기술력·경제성·친환경 장점을 가진 탄소중립의 핵심 에너지인 원자력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사실상 탈원전 시즌2 소지 다분
- 산업정책은 경제발전의 핵심이고 토대, 에너지 없는 산업은 활력을 잃고 도태되어 경제발전 저해,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로막을 우려
  - 이번 개편은 에너지백년대계를 파괴하는 졸속 5년정책으로 유럽에서 실패로 판명난 사례조차 교훈으로 삼을 줄 모르는 무모한 정책실험이 될 것
  - 탄소중립, AI 등 신산업 분야의 전력수요 급등, 수출 등 정책 목표 달성에 역행될 소지가 커 정교하고 균형적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

”

PART

II

경제 실정

반기업법으로 경제죽이기

부동산 부도정책

민생경제 파탄

“

“

## 반기업법으로 경제죽이기

”

이재명 정부 100일

19

국정 파탄 실정

##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

”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주요 쟁점

- ①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 제2호) : 직접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포함
- ② 노동쟁의 개념 확대(제2조 제5호) : 기존 근로조건 결정 외에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
- ③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제3조) :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경우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노조의 지위와 역할, 불법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등에 따라 배상의무자별 책임 비율을 제한

#### • 경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7.28.) 및 법제사법위원회(8.1.)에서 불법파업조장법 여당 강행 처리
- 국회 본회의(8.24.) 통과 \*재석 186명 中 찬성 183명, 국민의힘 표결 불참
- 경영계에서 손해배상청구 상한 제한, 급여 가압류 금지 등의 양보안을 제시하며, 타협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여당은 일방처리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불법파업조장법은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규정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임
- 또한 원청이 수많은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해 산업현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음
  - 현재 자동차, 조선업, 철강업, 건설업 등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청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
- 이로 인해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끊거나 해외로 이전할 경우, 중소기업 도산과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음
-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대상에 포함시켜 경영권을 침해하고, 사용자 불법행위를 빌미로 한 물리적 실력행사로 노사갈등과 산업현장 혼란이 심화 될 가능성
- 경제8단체를 비롯하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 개정안에 대해 우려 입장 표명

# 20

국정 파탄 실정

## 상법개악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경과
  - 25.7.3. 여야 합의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
  - 25.7.28.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경영권 보호 조항이 담긴 우리당案 제외하고 경영을 옥죄는 민주당案 상정 의결
  - 25.8.25.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악案 통과
  - 올 가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포함한 3차 상법 개악案 준비
- 쟁점
  - 2차 상법 개악시 상장사 77%가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등이 기업경영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답변
  - 글로벌 스탠다드에 未부합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기업 경쟁력 약화
  - 해지펀드 등 단기 수익 노리는 외국 자본에 경영권 위협 우려
  - 규제 피하기 위한 '피터팬 증후군' 발생 등 성장 궤도 왜곡 가능성 높아짐
- 투기자본의 놀이터
  - 외부 자본 장악력 확대 우려
  - 감사위를 통한 기업 정보 유출 가능성 높아져 기업경쟁력 위협

# 21

국정 파탄 실정

## 기업과 자본시장의 성장을 막는 반시장적 과세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이재명 정부의 사전 협의 없는 일방통행식 증세로 기업과 금융권, 개인투자자들의 조세저항 확산. 기업 여건과 국민 정서를 살피지 않은 증세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자본시장의 해외자금 유출만 초래할 것
- 주요 내용
  - (기업 증세)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인세율 인상. 법인세 과표구간별 1%p씩 상향
  - (자본시장 과세 강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종목당 보유액 50억원→10억원) ▲증권거래세율 인상(\*현행 0.15→0.2%) ▲기업의 배당유인을 꺾는 소극적 배당소득 분리과세(\*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14% /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 35%)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등
  - (징벌적 과세) 금융·보험업 부담 교육세율 인상으로 금융소비자 부담 전가 우려(\*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 신설, 세율 0.5→1.0% 2배 상향)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이재명 정부의 전방위 증세로 연간 8조 1,672억원에 달하는 세수 확보 예상. 이는 2010년 이후 정부 세법개정안 중 최대 규모의 세수 증가
- 정권이 5년간 사용할 210조원의 공약 자원 마련 위해 기업과 국민에 대한 증세도 모자라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으로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 전가
- JP모건 등 글로벌 IB들도 채찍만 있고 당근은 없다며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일제히 혹평.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확대에 반발하는 국회 청원은 150만명에 육박. 증세는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떨어뜨려 미국 등으로의 국내 자본 유출 우려
- 재정지출구조에 대한 정비 없이 금융업권에 대한 과세 강화는 결국 금융보험업의 재무상황을 악화시키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

# 22

## 건설안전특별법 추진

국정 파탄 실정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주요 내용
  - 경기침체 국면에 정부·여당이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을 강행처리하고, 건설안전 특별법 까지 다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건설업계 심각한 타격
  - (건설안전특별법)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영업정지나 연 매출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정부 여당은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는 등록 말소 요청 규정을 건설안전특별법에 새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
- 경과
  - 건설안전특별법, 25.6.27. 문진석 의원 등 발의, 8.21. 소위 회부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주요 문제점

문제점	내용
과도한 처벌 수위	• 매출 3% 과징금, 1년 영업정지, 형사처벌(징역·벌금)
중복 규제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존 법령과의 중첩
형평성 문제	• 전체 매출 기준 과징금, 과도한 부담 초래
도산 및 시장 위축	• 중소·전문 업체 중심 타격 가능
예방보다 처벌 중심	• 실효성보다 규제 목적에 치중

- 건설노조 및 건폭으로 기업활동 제약, 경제 타격
- 기업 위축, 노조 활개, 노조가 회사를 좌우
- 갑질 및 조폭 행태, 건설노조 소속 장비와 조합원 고용확대 요구
- 친노조 정부·여당, 기업 이탈과 경제 파탄을 주도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

# 부동산 부도정책

”

이재명 정부 100일

23

국정 파탄 실정

## 9.7 부동산 공급대책 진정성 없는 박스같이와 무책임한 LH 떠넘기기

“ ”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정부, 9.7.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했으나, 문재인 정부 '택같이' 수준의 재탕 정책 평가
  -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26~30)간 총 135만호, 연간 27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착공)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개발 등 공공의 역할 강화
  - 3기 신도시 등 현재 진행 중인 공공택지 사업의 인허가와 토지 보상 절차를 단축해 조기 공급 촉진
- 특히, 공공 주도의 공급 방안에만 초점 맞춰 시장 원리 외면 지적
  -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
  -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하여 1.5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
  - 노후 공공 임대주택 재건축과 공공청사, 국유지 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5만호 이상 공급
  -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로 관련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호 착공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국민 불신 높은 LH의 시장 원리 외면한 주택 공급 의구심 확대
  - 이미 부채가 160조원이 넘는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것에 대한 실현 가능 여부 불투명
  - 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 가능할 지에 대한 우려 증대
- 단기적 처방 부재로 부동산 실수요자 고통 심화
  - 공급까지 최소 5~10년인 상황에서 수도권 공급 부족에 대한 단기적 처방 전무
  - 집값 상승 주도 강남 3구에 대한 정책 등 초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전무
- 민간 건설 시장 위축 등 민간 부문 경제 악화
  - 이재명 정부에서 건설산업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 합리화 등 민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 없이 공공 부문 주도 정책 추진해 민간 건설 시장 추가 악화 가능성

# 24

## 대출 규제 6.27 부동산 대책

국정 파탄 실정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주요 내용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2주택 이상 추가 주택담보대출 금지, 6개월 내 실거주 전입 의무 등 도입
- 경과
  - 6.27.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특혜와 이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발생하자, 8.21. 국토부에서 수도권 대부분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6·27 부동산 규제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은 차단, 현금 부자·외국인은 하이패스
  - 정부가 6·27대책을 통해 수도권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지만, 대책 이전에도 강남을 포함한 서울 전 자치구의 아파트 평균 주택담보대출액은 6억을 크게 밀돈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남
  - 이는 대체로 보유 현금에서 부족한 자금만 대출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
  - 8.21. 국토부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여론에 떠밀려 급조한 보여주기식 행정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허가이고, 서민들의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는 줄어들고, 외국인의 주택 구입은 상대적으로 용이한 불평등·역차별 상황은 개선되지 않음
- ‘규제 남발, 공급 실종’의 민주당 부동산 정책은 ‘국내 부동산을 부도내는 부동산’ 정책
  - 민주당의 재개발초과이익환수제 유지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서로 모순되며, 현재 정부·여당의 재개발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규제 남발, 공급 실종’의 정책 기조는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좁히고,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음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

# 민생경제 파탄

”

이재명 정부 100일

25

## ‘쉬었음 청년’ 지속 증가에도 민생 파탄 정책 가속화

국정 파탄 실정

“

”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주요 내용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9~23) 5년간 청년 인구는 감소(966만→879만)하였으나, ‘쉬었음’ 청년은 증가(36만→40만)
  - 특히 지난 7월 ‘쉬었음 청년’은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대로 증가
  - 기업이 경기 침체 탓에 고용을 줄인데다 신입사업보다 경력사원을 선호한 결과
- 경과
  - 고용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발표(25.8.)
    - \* ‘발굴-다가가기-회복’ 지원 체계 구축
    - \* 미취업 청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1 접촉으로 취업지원을 연계하며 심리상담 등으로 회복 지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달(25.9.) 中 청년 고용 지원 대책 발표 예정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쉬었음 청년’ 지속 증가에 따른 문제점
  - 생산가능인구 활용이 제한되어 경제성장률 저하와 세수 감소 우려
  - 청년의 소득 부족과 사회적 고립이 장기화되면, 주거·복지 수요가 증가하여 사회적 비용 증가
  - 인력 부족, 소비력 감소, 청년층 취업난 심화가 발생하며, 세대 간 격차와 사회적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음
- 현 정부·여당은 ‘쉬었음 청년’ 증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 강행 등 청년일자리 고민없는 민생 파탄 정책을 추진 중
  - 현정부 100일 심각한 청년일자리 등 고용대책은 안보이고, 민노총출신 고용노동부 장관답게 노동권 강화 정책들만 추진

# 26

## 밥상물가 고공행진

국정 파탄 실정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결과 농축산물은 전년 동월대비 4.4% 상승, 지난해 7월 6.2% 상승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 수치
  - 시금치(171.6%), 배추(51.7%), 쇠고기(6.5%), 돼지고기(4.2%) 상승[8.21. 한국은행 발표]
- 밥상물가 관련한 정부여당의 내로남불
  - (2024.10.17. 이재명 대표 배추밭 방문) 이재명 “농업 생산은 들쭉날쭉하다. 그런데 정부는 가격이 폭락하면 모른 척하고, 폭등하면 수입하는데, 농민은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라며 정부 비판했으나 정권 잡고는 달라진 것 없는 내로남불. 밥상물가와 대응방식 지적하던 민주당도 침묵과 방관 中
- 유통구조개선, 수급관리 강화, 기후 대응 품종개발, 생산기술 개발,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다방면의 물가 대응 필요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일시적·계절적 물가상승이 아닌 만성적 물가상승
  - 기후변화는 일시적 문제가 아닌 지속적이며 더욱 악화되는 문제
  - 기후대응, 유통구조 개선 등 근원적 처방 필요
- 이재명 정부의 소비쿠폰, 무리한 확장재정이 물가 자극
  - 현재 물가상승 단순한 기후문제 아닌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재정투입이 물가 자극

# 27

## 이재명 정부의 신관치금융

국정 파탄 실정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이재명 정부, 겉으로는 포용금융·생산적 금융이라고 포장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입김이 금융권에 강하게 작동되어 각출 분위기 조성
  -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구성에 민간금융권 참여 요청
  -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을 통해, 생명·손해보험업계 각각 150억원씩 총 300억원의 상생기금 조성 예정
  - 채무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금융권 4000억원 출연 예정
  - 세법개정을 통해 연 수익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올리기로 결정
  - 은행대출금리 산정시 법정비용(지불준비금, 예금보험료, 개별 법령에 따른 법정 출연금) 반영금지
  - 금융권에 보이스피싱 무과실책임 도입 예정
-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금소원 등 옥상옥 구조 금융감독체계 개편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윤석열 정부 당시 은행의 과도한 금리 지적 등에 대해 ‘관치금융’이라고 공격했던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핵심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금융권에 과도한 출연을 요구하고 있어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대통령이 은행권의 과도한 이자장사에 대해 비판하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예대마진은 생각보다 높다.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금융권이 답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
- 금융권에 대한 과도한 출연 요구 등은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

PART

III

외교안보 참사

외교참사

굴욕적 통상협상

굴종적 남북관계, 안보위협

“

# 28

국정 파탄 실정

## 서해 불법 구조물 방치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중국이 최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하여 해양주권 침해 우려  
- 24년 4~5월에 중국은 구조물 2기를 설치하였고, 12월에도 추가로 1기를 설치하였음. 이에 윤석열 정부는 강력 항의한 바 있음
- 올해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의 침해 규탄 및 한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킴
- 국회의 결의안 채택과 정부의 강력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과 시설, 부표에 대해 양식용, 해양관측용이라고 주장하며 철거를 하지 않고 있음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는 우리나라의 해양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양 주권과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중요한 일임

“

# 외교참사

”

# 외교적 선언만 있고 실익은 없는 대미외교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북핵 대응 공조는 선언적 수준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강화가 강조되었지만 실제로는 공동 성명과 원론적 발언에 그침
  - 구체적으로 ▶전략자산(핵잠수함, 전략폭격기) 상시 전개 약속 부재 ▶핵우산 운용 방식, 공동 작전계획 등 실질적 로드맵 미제시 등
- 경제안보 현안 - IRA·반도체법 미해결
  -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전기차 보조금에서 한국산을 사실상 배제,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으로 한국 기업에 과도한 기술 이전·정보 공개 요구
  -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지만, 결과는 미국 측 '검토' 수준의 답변에 불과
- 관세 협상 - FTA 혜택 상실과 15% 후퇴
  - 한·미 FTA 체결 이후 자동차·철강·기계 등 주요 품목에서 무관세 혜택을 누려왔지만 이번 협상으로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15% 일률 관세를 적용하면서, FTA로 보장받던 기존 무관세 지위상실
  - 일본, EU 등 다른 국가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묶이며 FTA의 가치가 사라진 셈
- 한미 정상회담 직후 5000억불 대미투자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대대적 단속
  - 9. 5.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자 단속, 한국인 300여명 포함 475명 체포
  - 국토안보수사국, 이민세관단속국, 연방수사국, 마약단속국, 주류담배총기폭발물 단속국, 국세청, 조지아주 경찰 등 복수기관 합동작전으로 요원 500여명 비롯군용차량과 헬리콥터 까지 동원 대대적인 단속집행
  - 美, 국토안보수사국 수사 역사상 단일 현장 최대 규모 단속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전술핵 위협 앞에서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안보 보장 실패
-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불리한 조건 속에서 보조금 차별로 전기차 판매 경쟁력 상실, 미국 내 투자 확대를 강요받으면서도 경쟁사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는 상황으로 결국 정부가 국익을 지켜내지 못하고 기업만 희생하는 구조가 고착화
  - 한국은 자동차·철강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한미 관세협상이 실효화 되지 못한다면 수출 타격 → 산업 전반에 충격 → 고용·성장률 하락 불가피, 경제적으로는 FTA 체결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과 다름없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
-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대대적 단속으로 공정·일정 영향 및 투자 리스크
  - 배터리 공사 중단과 대규모 구금으로 일정 차질·비용 증가 우려
  - 향후 한·미 대규모 투자(수백억~수천억 달러급) 협상·신뢰에도 파장 → 안보는 선언만 있고 실질적인 조치는 없으며, 경제는 기업 희생만 강요, 관세는 오히려 과거로 후퇴



# 전략 부재로 인한 대중·대러 외교 실패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한국의 분명한 전략 부재
  - ‘균형 외교’를 표방했으나 결과적으로 미국에도, 중국에도 신뢰 상실
  -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 단절 → 수출·관광·문화 분야 리스크 확대
  - 기업 현장에서는 중국 시장 의존도 높은 산업의 불안 심화
- 공급망 불안 심화
  - 미국의 공급망 재편 요구에 적극 대응 못해, 한국 기업만 이중 부담
  -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부재
- 대중 외교의 국격 추락
  - 한중 정상회담 성과 미비, 공동 어젠다 제시 실패
  - 북한 문제, 기후·환경 협력 등에서 한국 배제경향 강화
-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의 모호성
  - 인도적 지원만 강조하며 안보·외교적 책임 회피
  - G7·EU 주요국과 달리 대러 제재·군수 지원에 소극적 태도
- 북·러 밀착 대응 실패
  -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의혹, 러시아의 대북 군사 기술 지원 가능성에 사실상 무대응
- 소극적인 에너지·경제 외교
  - LNG·원유 수입 다변화 정책 미흡, 대러 제재로 인한 기업 피해 지원책 부족 등 러시아 에너지 의존 축소 과정에서 한국 기업 보호 부재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반도체·배터리·희토류 등 핵심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을 낮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국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 강화
  - 전략적 모호성과 미온적 태도로 “중국 리스크 관리 실패, 국익 상실”
  - 국제사회 대러 제재 흐름에도 확실히 동참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는 인상 확산
-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대응 전략 미흡, 북·러 밀착 대응 실패
  - 북한의 러시아 무기 지원 의혹, 러시아의 대북 군사 기술 지원 가능성에 사실상 무대응
  - 한미일 공조 강화 대신 “대화” 만 강조해 실효성 상실
    - 국제사회 공동대응에 뒤처지며 “신뢰상실, 북·러 협력 대응 공백”
  - 뿐만 아니라 러시아 에너지 의존 축소 과정에서 한국 기업 보호 부재

“

## 굴욕적 통상협상

”

이재명 정부 100일

31

## 국가경제 파탄 관세협상

국정 파탄 실정

“

”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한미 협상 타결로 25% 상호관세, 자동차 품목관세가 15%로 인하(25.7.30.)
  -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패키지 및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합의
  - 반도체·의약품 등 향후 관세 부과 예정 품목에 대한 최혜국대우 확보 등
- 일본·EU와 같은 15% 관세율 확보는 한미 FTA 체결국으로서 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와 이익 감소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
  - 특히, 정부가 대미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 품목관세 12.5% 관철시키지 못하고 경쟁국인 일본과 EU와 동일한 15% 확보는 협상 실패, 사실상 한미 FTA 종료
- 미국의 압박이 큰 쌀, 소고기 등 시장 추가 개방 관련 양국의 상이한 발표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대응 불투명, 반도체 관세 100% 부과 선언, 추가 협상 진전 부족
  - \* 한미정상회담(8.25)에서 합의문이 불발되어 사실상 성과 없이 종료, 불리한 상황 지속
- 트럼프 대통령, 미일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 15% 관세 적용(25.9.4.)
  - 우리는 아직 행정명령 서명이 없어 FTA 혜택에서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
  - 관세 인하 시점이 불투명하여 당분간 자동차 등 제품의 경쟁력 저하 및 수출 감소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日·EU와 동등, 불확실성 해소 여론에도 한미경제동맹의 위상과 효과 추락, 후속 협상 관건
  -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 적용 품목 확대, 대미투자, 안보 현안 등 관련 개선 미진 상황
- 소고기·쌀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 및 검역절차 완화 요구, 디지털 무역 확대 여부에 따라 국내 산업에 영향, 관련 대책 마련 필요
- 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및 대미투자 부담 가중
  - 국익 차원의 산업별 전략적 대응, 대미투자의 상생적 구조 및 이익 배분 필요
- 자동차, 농산물 시장의 완전 개방(트럼프) 주장과 농축산물 개방하지 않는다(용산)는 상이한 발표로 향후 해당 분야와 종사자들과의 갈등과 피해로 확대될 소지

“

## 굴종적 남북관계, 안보위협

”

이재명 정부 100일

32

국정 파탄 실정

## 이재명 정부의 9.19 군사협정 복원

“

”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경과
  - 文정부 남북군사합의 체결(18.9.19.) 이후 北 3,600회 이상 협정위반 자행
  - 尹정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의결(24.6.4.)
  - 李정부,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협정 복원 밝힘
- 쟁점
  - 북핵에 대한 실효적 대책 全無
  - 우리군의 전투력 악화와 국가안보 악영향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한-미 연합훈련 관련
  - 통일부장관 한-미 연합훈련 연기 요청(25.7.28.)
  - 연합훈련 중 기동훈련 절반은 한 달 가량 연기(25.8.18.)
- 대북 심리전 금지
  -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중지 요구(25.6.9.)
  -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25.6.11.)
  - 휴전선 대북 방송 중단
  - 대북 라디오 및 TV방송 중단
- 이재명 정부의 굴종적 유화책에도 북한은 무응답
  - 접경 지역 배치한 대남 확성기 철거의향 없음 밝힘(25.8.14.)
  - 오히려 북-중-러 단결강화 시도 및 재래식 무기 개발 고도화 및 러시아로부터 드론 기술을 이전받아 드론 생산 등

# 33

## 원칙없는 남북대화 집착

국정 파탄 실정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커지는데도 '대화'와 '평화 제스처'만 반복
  - 북한은 올해 들어 수십 차례 미사일 도발, 전술핵 전력 고도화
  - 정부는 강력한 대응 대신 '대화 재개'라는 공허한 구호만
  - 결과적으로 국민 안전은 불안해지고, 북한은 "무력 도발 → 유화책 요구" 패턴을 반복
- 대북 확산기 방송 중지 및 장비 철거
  - 군은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이유로 지난해 재개했던 대북 확산기 방송을 약 1년 만인 2025년 6월 11일 전면 중지, 이어 8월 초에는 고정식 확산기 장비까지 철거하며 추가적인 안보 장치 해체 움직임
- 북한의 반응: "흥미 없어"
  - 북한 김여정은 2025년 7월 28일, "서울에서 어떤 제안이 나오더라도 흥미 없다"며 우리 정부의 대북 유화 조치에 명확한 거부 의사 밝힘
- 한미·한일 공조 약화
  -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대응 논의는 선언적 수준
  - 한일 협력은 과거사 문제로 경색 가능성 상존
  - 결국 북한 위협에 고립된 한국이라는 구조가 강화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안보적 자해 행위 수준의 유화 조치
  -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철거,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 등은 북한의 적대 행위에 선제적으로 굴복한 셈, 우리 스스로 안보 수단을 제거한 결과
  - 이러한 조치들이 북한의 반응도 이끌지 못했다는 사실은 외교적 무력함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
- 표현의 자유 억압 - 내부 민주주의의 약화
  - 대북전단 살포 요청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스스로 제약한 것이며, 특히 대북정책을 둘러싼 내부 여론 형성의 다양성과 자유를 의도적으로 막은 결과
  - 북한은 대북 방송 중지나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흥미 없다"는 공식 메시지는 정부의 외교적 노력 자체가 무위로 돌아갔음을 증명
- 안보 공백과 심리전 수단 상실

# 34

## 대북전단 금지

국정 파탄 실정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남북관계발전법」 전단규제 조항, 표현의 자유 침해로 위헌 결정(23.9.26.)
  - 24년, 대북전단 단체는 총 14회(공개 기준) 전단을 살포
    - \* (25년 3월부터 시작해 파주 임진각 등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집회신고가 다수 있었으나, 민간단체와 정부가 소통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중단선언. 6.14 이후 대북전단 살포 확인되지 않음)
  - 경찰과 지자체\*는 「항공안전법」 및 「재난안전법」 등을 근거로 전단 살포 규제 중
    - \* 접경 지자체 일부는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 설정(대북전단 살포행위 금지)
- 이재명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방지를 위한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기존에 검토된 법령(항공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과 국회 심의 중인 남북관계발전법을 바탕으로 대북전단 금지를 확정지어 나가겠다 밝힘
  - 윤석열 정부 때는 국회에 현재 위헌 판결에 따른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을 요청하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한반도 상황 관리에 대한 우려는 전달하면서도 강제로 금지하지는 않았었음. 이는 현재가 판결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한 것이었음.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기조로 180도 선회함
  - 민주당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경색되게 만들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민간단체 처벌을 지속 요구해 왔으며, 국회에는 사전신고, 처벌 등의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16개 발의한 상태 (※국민의힘 2건, 민주당 16건 등 대북전단과 관련된 개정안(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현재 총 18건 상임위 법안소위 계류 중)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대북전단 금지같이 남북의 대립적 접근을 자제하면 북한 접경지역 긴장을 낮추고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북한과의 대화 재개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오히려 북한은 대남확성기를 추가 배치하고,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를 '어리석은 망상'이라 비난하며 여전히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음
  - 현재 이재명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까지 동원하며 북한의 비위 맞추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권리만 옥죄는 꼴로 대북정책의 대표적인 실정 사례

# 35

## 전작권 폐지 국정과제 추진

국정 파탄 실정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전작권 전환 경과
  - 노무현 정부 때 12.4. 전환으로 변경
  - 이명박 정부 때 15.12. 연기
  - 박근혜 정부 때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 충족시 전환하기로 합의
- 쟁점
  - 전작권 전환 조건을 위한 3가지 선제 조건 달성 여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주한 미군도 우려
  - 주한미군 사령관도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25.8.8.)
- 대북억지력 약화
  - 일본에 있는 7곳의 유엔사 후방기지나 하와이·괌 미 본토에서 지원 어려움
  - 미국의 위성 및 통신 등 첩보자산을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사시 즉각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

이재명 정부 100일

# 국정 파탄 실정

”

PART

IV

미래세대 부담

반건전 재정  
교육차별

“

“

## 반건전 재정

”

이재명 정부 100일

36

국정 파탄 실정

## 미래 세대 부담만 늘리는 ‘부채주도 성장’

“

”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지방선거를 앞둔 정권의 포퓰리즘 폭주로 미래 세대에 빚더미만 안겨줄 ‘부채주도 성장’
  -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55조원(8.1%) 증가한 역대급 규모. 반면, 총수입은 22.6조원(3.5%)에 불과
  - 아동수당 지원대상 2029년까지 11세로 확대, 6개군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주민소득 실시,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등으로 정부 의무지출 규모는 향후 5년간 100조원 이상 증가 전망
  - 정부는 79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5.4만명에게 월 4만원의 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 실시, 소상공인 바우처 제공 등 이재명표 예산을 첫째 대거 편성
  - 현금지급 사업은 정부의 직접 투자·소비에 비해 경기부양 효과가 크게 떨어져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킬 뿐. 경제체질 개선이 아닌 지방선거를 앞둔 ‘재정 한탕주의’는 나라 경제만 골병들 우려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년도 1,415조원, 2029년에는 1,789조원으로 연평균 122조원씩 증가 전망
-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본예산 기준 73.9조원에서 내년 109조원으로 크게 증가, 국가채무비율은 48.1%에서 51.6%로 첫 50%대 진입
- 내년 차환 물량을 제외한 국채 순발행액은 116조원으로,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만 올해 30.1조원, 2029년에는 44조원으로 증가할 전망
- 이는 OECD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채무 증가세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증가 속도가 신용등급 압박 요인이라며 이미 경고한 바 있음
- 이재명표 확장재정은 5년 내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도 급증. 노란 봉투법, 상법 등 기업 부담 증가는 청년들의 고용 악화로 이어져 미래 세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

# 37

## 선심성 소비쿠폰 지급

국정 파탄 실정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이재명 대통령 포퓰리즘의 신호탄, 일회성 현금 살포
  - 현금살포는 '긴급한 특단'이 아니라 '위기 연장의 도구'에 불과
- 효과성 측면에서 소비 촉진 효과 불확실
  - 국내외 연구 결과 현금성 소득지원 시 소비 효과는 투입 재원의 19%~36% 수준. 기존 소비 대체가 크고 추가 소비는 제한적임

•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12월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가 효과는 26.2~36.1%에 불과하다고 지적함. 투입된 재원의 3분의 2는 별다른 경제적 효과를 내지 못한 것임

-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진 목적의 효과 불확실
  - 소도시·낙후 지역의 경우 가맹점 수가 적어 추가 소비 효과 반감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현금성 지원은 정책 효과가 불투명한 데다 물가를 자극하는 부작용
  -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 5월(1.9%), 6월(2.2%), 7월(2.1%), 8월(1.7%)
    - ※ 8월의 경우 SK텔레콤 유심 해킹 관련 통신 요금 50% 감면의 영향으로, 통계청은 일시적인 통신요금 할인을 제외하면 8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3% 수준이라고 설명
  - 문재인 정부도 '5년간 부채 763조 폭증', '코로나19 당시 유동성 확대 정책으로 2022년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 같은 결과를 낳은 포퓰리즘 정책 남발
- 포퓰리즘 정치 고착화와 정책의 질적 저하
  - 정책의 효과성보다 정치적 인기에만 치중하는 선심성 정치 문화 지속 우려
  - 근본적 구조 개혁 대신 임시방편적 현금 지급에만 의존하는 정책 패러다임 고착화
-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로 대외 신인도 하락과 경제 위기 대응력 약화 초래 우려
  - 국채 이자 비용만 연 30조원 이상으로 다른 필수 정책 예산 압박하는 악순환 구조
  - 무분별한 재정 확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과 통화 가치 하락 우려
  -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으로 장기적 경제 성장 동력 훼손

# 38

## 국가 재정 건전성 위협하는 선심성 포퓰리즘 복지 정책

국정 파탄 실정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이재명 정부,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 정책 추진
  - (아동수당)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발표시, 월 10만원은 현행 유지하고 지급 대상만 현재 만 8세 미만에서 점진적으로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
    - ※ 아동수당법(개)(전진숙, 24.06.05.) : 아동수당 지급대상(8→18세 미만)과 금액 (10→20만원) 상향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증대
  - (아동수당) 올해 1조 9588억원에서 내년 2조 4822억으로 증가, 2030년도에는 32조 1272억원까지 불어날 전망(연평균 10.2%)
- 이재명 정부 역대 최대 규모(728조원) 2026년 예산 확정하고, 이 중 복지성 예산만 270조원에 달해 미래세대 부담 가중 현실화

# 39

## 묻지마 채무탕감(배드뱅크)

국정 파탄 실정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서민 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무 감면
  - 캠프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가 대상채권 일괄 매입
  - 7년 이상 연체 +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113만명, 16.4조원 규모
    - ▶ 상환 능력 상실 → 소각
    - ▶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강화된 채무조정(예 : 원금 80% 감면, 분할상환 10년)
- 경과
  - 2025년도 2차 추경 예산에 신규반영(4천억원) + 은행권 등에서 4천억원 각출 예정
  - 8월말 SPC 설립 완료, 현재 금융권과 협약 체결 협의 중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
  - 연체자가 성실상환자에 비해 더 약자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연체자에 대한 탕감은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성실상환자 역차별 논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상대적 소외감 등
  - 향후 '빛은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로 연결될 우려
- 채무의 성격을 묻지 않는 묻지마 탕감 문제
  - 소상공인 등 업종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함
  - 금융당국은 우리 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도박 빛 등은 걸러내겠다고 하지만, 일괄 매입방식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빛의 종류를 걸러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
- 금융권 출연의 적정성(4000억원 예정)
  - 금융권은 대출해준 빛을 상환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해당 빛을 면제해주기 위한 재원을 출연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 부담이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
- 외국인 포함 논란
  - 재정을 투입한 채무탕감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될 수 있는 구조
  - 금융당국은 최대한 심사를 통해 외국인을 배제하고,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나 실제 가능 여부는 불명확

이재명 정부 100일

# 국정 파탄 실정

“

# 교육차별

”

이재명 정부 100일

40

국정 파탄 실정

## AI 교과서 혼란

“

”

### 1 총체적 국정 실패 실태 보고

-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이었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교육 현장 도입 한 학기만에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
- 주요 쟁점
  - 정권 따라 바뀌는 교육 정책으로 교육 현장 혼란 가중
  - AIDT 발행사, 교육부 상대로 행정소송·헌법 소원 등 갈등 본격화
- 주요 경과
  - 2023년 6월 : 교육부, 2025년 AIDT 도입 방안 발표
  - 2024년 10월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해 AIDT를 교과서로 인정
  - 2024년 11월 : AIDT 주요 추진 계획 변경
    - ※ 국어, 기술·가정 과목 제외, 초등 사회·과학 및 중등 과학 과목 2027년 도입으로 연기
  - 2025년 3월 : 학교 현장에 AIDT 도입
    - ※ 영어, 수학, 정보 과목 도입, 1년간 학교별 자율 활용 방침
  - 2025년 8월 : AIDT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개)」 국회 본회의 통과 (2025.8.4.)

### 2 실정의 대가: 국가 위기와 국민 삶의 붕괴

- 정권 따라 바뀌는 교육 정책으로 교육 현장 혼란 가중
  - AIDT의 교육 격차 축소, 맞춤형 수업으로 학업 능력 향상 등 긍정적 효과 있음에도 정권 교체에 따른 주요 교육 정책 변경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현장 혼란 가중
  - 이재명 정부, “초·중고 AI교육 강화” 발표에도 ‘AI 교과서 격하’로 정책 엇박자
- AIDT 발행사, 교육부 상대로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갈등 본격화
  - AIDT 발행사들 교육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추후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과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진행 예정으로 정부와 갈등 본격화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란  
실정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란

실정